

올해 실업급여 역대 최대 전망…11월까지 11조

작년보다 6119억 증가 1인당 일자리 ‘0.43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9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6억원(6.0%)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건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구직급여가 9개월 연속 월 1조원 넘게 지급되며 역대 최장 1조원 이상 지급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지급액은 11조 4715억원이다. 지난해 1~11월 지급액

(10조8596억원) 보다 6119억원 많다.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실업자가 많았던 2021년 1~11월 누적액이 11조24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2월 지급액까지 더하면 올해 구직급여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5만4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만8000명(1.1%)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11월 기준으로 볼 때 2003년 11월(6만1000명)

이후 가장 낮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91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0만8000명 늘면서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000명씩 감소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가입자는 각각 1만6000명씩 줄었다.

제조업은 수출과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6개월 연속 내림세이며 감소 폭은 더 커지는 추세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5000명으로 전자·통신 증가 폭은 확대됐으나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감소 폭이 커졌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4만7000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업황 불황이 주된 이유다.

남성 가입자는 860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3000명, 여성 가입자는 705만2000명으로 13만5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7만8000명)·50대(4만2000명)·60세 이상(17만1000명)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늘어난 데 비해 29세 이하(9만2000명)와 40대(2만

1000명)에서는 인구감소 등 영향으로 줄었다.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8000명(3.3%) 감소했다.

고용24 신규 구직 인원은 지난달 37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2000명(3.3%)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0.46) 보다 낮은 수준으로, 11월 기준 1998년(0.17) 이후 최저치다.

송대우 기자 sdw0918@gwangnam.co.kr

‘대장주’ 알테오젠, 코스피로 2위 에코프로비엠도 재추진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코스피 이전상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코스닥 상층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알테오젠은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코스닥 상장폐지 및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알테오젠은 지난 8월 코스피 이전에 대한 계획을 주주 및 투자자들과 공유했고, 그 다음달인 9월 이전상장을 위한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권을 선정하는 등 관련 준비를 진행해왔다.

회사는 향후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후 상장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보다 0.33% 오른 45만8000원에 장을 마쳤다.

알테오젠 시가총액은 24조3057억원으로,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501조270억원의 4.89%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하면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약 5%가 줄어드는 셈이다.

코스피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 시장은 지난달 말 정부가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상승세에 시동을 걸었다.

코스닥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온 지난달 28일에는 같은 달 17일(902.67) 이후 9거래일 만에 900선을 회복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와 연기금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 부동산으로 못 가는 개인 투자금을 끌어오거나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코스피 ‘불장’에도 제자리걸음을 해온 코스닥이 이를 계기로 1000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금씩 커졌다.

전국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스닥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커지고 우호적 투자 환경이 조성되면서 매수세가 모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대장주 알테오젠이 코스닥을 빠져나가게 되면서 ‘천스닥’ (코스닥 1000) 달성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스피에 비해 규모가 작은 코스닥으로선 대장 기업 이탈에 따른 여파가 그만큼 수박에 겹기 때문이다.

덕육이 알테오젠 이전으로 다음 대장주가 될 시가총액 2위 에코프로비엠도 코스피 이전상장 재추진설이 나오며 코스닥 시장에 먹구름을 드리운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이전상장을 의결했고, 같은 해 11월 27일 한국거래소에 이전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현대차그룹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 (WHE 2025)’에 참여해 전시를 마무리했다. WHE 2025는 2020년부터 개최된 국내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와 기존의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로 올해 처음 열렸다.

현대차그룹, 수소박람회 ‘WHE 2025’ 성료

나흘간 2만5000명 방문…7개 그룹사 최신기술 선보

현대차그룹은 지난 4~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 (WHE 2025)’에 참여해 전시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WHE 2025는 2020년부터 개최된 국내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와 기존의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로 올

해 처음 열렸다.

‘하이드로젠 파이오니어: 이노베이트, 유나이티드, 엔 액셀레이트 (Hydrogen Pioneers: Innovate, Unite, and Accelerate)’를 주제로 진행된 WHE 2025에는 나흘간 2만5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수소 분야 최신 기술 트렌드를 이해

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행사에서 현대차, 기아,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빌 등 7개 그룹사가 현대차그룹의 수소 브랜드이자 사업 플랫폼인 HTW를 중심으로 공동 부스를 마련했다.

또 수소 생산, 수소 충전 및 저장, 수소 모빌리티, 산업 애플리케이션 등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기술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선보였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전기요금 빠진 석유화학 특별법…현실 외면한 입법”

여수상의 등 상공업계, 전기요금 지원 시행령 반영 촉구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기요금 감면이 빠진 특별법은 현실을 외면한 입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상의에서 여수국가산단 내 회원사와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지역 상공업계와 함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조항이 빠진 데 대해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특히 이들은 성명을 통해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 “현장의 절박함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특별법이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여수상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국회 석유화학 특별법 공청회 발제와 산업통상부장관 면담을 비롯해 국회·정부·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언론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산업현장의 위기를 꾸준히 알려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은 여수지역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로 이어졌지만, 이번 특별법에서 전기요금 정부지원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여수상의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은 최근 3년 동안 대규모 적자와 설비 축소 압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4년간 약 80% 급등해 기업들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상의는 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비용 급등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생산원가를 가중시키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문선 회장은 성명을 통해 “여수국가산단은 이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질서 있는 구조조정, 산업경쟁력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없이 통과된 특별법은 반쪽짜리 법안일 수밖에 없다”며 “시행령 단계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실질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여수 상공업계 참석자들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정부지원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상공업계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수상의는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후속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쿠광·SKT, 개인정보배상보험 고작 10억

기업 대부분 법정 최소금액만 가입…“기준 상향 필요”

쿠광과 SK텔레콤 등 대규모 고객 계정 유출 사고를 낸 기업 대부분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을 법정 최소금액으로만 가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는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고 정보주체 수가 1000만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최소 보험 가입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쿠광은 현재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보장 한도 10억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는 이번 정보유출 사고에서 쿠광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쿠광은 현재 메리츠화재에 보험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사고 규모에 비해 10억원으로는 사실상 보상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 보험 점수 여부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고객 계정이 3370만개에 달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3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SK텔레콤 역시 현대해상의 개인정보유

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 한도는 동일하게 10억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이에 대비해 관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정보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가입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다.

문제는 최소 가입 한도를 너무 낮게 설정해 실질적인 배상 여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매출 800억원 초과·구간의 대기업조차도 보험 최소 가입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수십만~수천만명에 달할 만큼 심각성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총 10억원의 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보험 한도로 인해 유출 사고 기업이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손해보험업계와 손보협회 등은 대규모 정보 보유 기업에 대한 최소보험가입금액 상향 필요성을 조만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양제철소, 무장에 도시환경조성 ‘앞장’

편의시설 57곳에 경사로 설치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함께 무장에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들여 57개소에 무장에 경사로 설치사업을 벌였다고 8일 밝혔다.

‘무장에 경사로 설치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식당을 비롯해 시설물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광양제철소와 인터내셔널은 각각 5000만원을 지원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식당, 마용실, 약국, 카페, 마트 등 57곳의

지역 편의시설에 경사로를 설치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최근 중마장애인복지관에서 정인화 시장, 박종일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정현주 중마장애인복지관장과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장에 경사로 설치사업 현판식’을 가졌다.

박종일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드린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최근 중마장애인복지관에서 ‘무장에 경사로 설치사업 현판식’을 가졌다.